

# 광주시 택시요금 17% 인상 추진

### 2013년 이후 5년만에... 12월 인상 여부 최종 결정 기본요금 중형 3300원, 모범·대형 3900원 검토

광주시가 택시업계 경영 개선을 위해 조만간 택시 요금을 17%가량 인상하고, 이 인상분이 택시 운전사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 2013년 중형택시 기준 2800원으로 기본요금을 올린 뒤 5년 만의 인상이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 택시조합으로부터 요금 조정 건의서를 접수하고 자체 인상을 마련했다.

앞서 택시조합은 중형택시(8163대) 기준 기본요금(2km)을 현재 2800원에서 35%

인상된 3600원으로 올려달라고 건의했다. 모범·대형택시(9대)는 3200원에서 35% 인상된 4500원으로 올려달라고 했다.

이에 광주시는 택시조합 건의안을 검토해 용역 등을 통해 자체 인상을 마련했다. 광주시는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3300원으로, 모범·대형택시는 39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거리요금은 중형택시는 현재 100원 기준 145m에서 134m, 모범·대형택시는 172m에서 156m로 줄일 계획이다.

시간요금은 중형택시는 100원 기준 35

초에서 32초, 모범·대형택시는 41초에서 36초로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광주시는 "택시조합 건의안 절반 수준의 인상안이다"고 설명했다.

광주 지역 택시 기본요금은 1998년 1300원, 2002년 1500원, 2005년 1800원, 2008년 2200원, 2013년 2800원으로 올랐다.

광주시는 인상안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용역이 끝나는 대로 오는 11월 광주시의회 의 의견을 청취한 뒤 물가관리심의위원회를 열어 12월에 인상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심의가 통과되면 12월 중 인상안이 적용될 전망이다.

현재 광주 택시업체는 76개이며, 일반 택시 3377대, 개인택시 4795대 등 총

8172대가 등록돼있다. 특·광역시 기준 기본요금은 광주가 대구·대전·울산과 같고, 부산이 3300원으로 가장 높으며 서울·인천이 3000원이다.

또 부산시가 지난해 500원가량 기본요금을 인상한데 이어 최근 서울, 대구, 인천 등지도 인상을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 등은 인상분의 상당수를 택시 운전사에게 주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2013년 택시요금 인상 이후 최저임금과 물가 상승, 이용객은 감소했으나 5년간 요금이 동결돼 경영난이 가중됐다"며 "택시업계의 경영개선과 택시 운전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 군공항 소음 배상금 지난 3년간 493억원 지급

### 대구 3793억원 최고

공군이 최근 3년간 지출한 7700억원 대 전투기 소음 피해 배상금 중 493억원이 광주 시민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8월말) 공군을 상대로 제기된 소음피해 배상 소송 중 공군 측이 패소하거나 일부 패소한 소송은 381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배상금은 이차까지 포함해 7771억원에 이른다.

특히 광주의 경우 서구 주민들이 제1 전투비행단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해 받은 배상금은 493억원이었다.

지역별로 대구가 3793억원으로 가장 많은 배상을 받았고 이어 수원 1477억원(제10전투비행단), 강릉 1023억원

(제18전투비행단), 청주 313억원(제17전투비행단), 충주 199억원(제19전투비행단), 원주 178억원(제8전투비행단), 서산 98억원(제20전투비행단) 등이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지출돼 군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음에도 정작 주민에게 돌아가는 배상금은 피해 정도에 비해 쥐꼬리에도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 기간(3년간) 피해 주민 1인당 지급된 배상금은 150만~250만원 수준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기 의원은 "같은 5년 이상 걸리는 소송으로 주민 한 명 당 손에 쥐는 배상금은 너무 적다"면서 "공군은 매년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고, 주민은 극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한 배상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중앙권력 나누면 지방역량 배가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한 시도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중앙권력을 나누면'의 의미인 '÷'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의 역량이 배가 되고'의 의미인 '×'를,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주민 행복은 더해진다'의 의미인 '+'를 들고 있고 각 시도지사는 각 시도의 자랑거리 모형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 '서남해안 관광도로 건설' 정부에 건의

### 전남·충남·경남 등 7개도

전남도와 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 등 7개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서남해안 관광도로 건설'을 정부에 건의했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들 7개도 단체장은 이날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앞서 서남권을 세계적인 해양관광벨트로 조성하기 위해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장은 "섬 지역을 연결하는 지방도 연륙·연도교 사업은 도비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데, 지방비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다"면서 "사업의 장기화를 우려해 조속한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국도로 승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7개도 단체장들은 국도·국가지원지방도 승격 대상지를 각 1건씩 발굴해 공동건의문을 발표함으로써 청와대·국회·총리실·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도 전달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민선7기 서남해안 관광도로 건설을 위해 완도에서 고흥까지 연결되는 지방도 830호선을 국도 27호선으로 승격(42.4km, 8100억 원)해 줄 것을 공동건의문에 담았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남해안 연안은 천혜의 생태자원과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접근성을 개선하면 세계적인 서남해안 관광휴양벨트를 조성할 수 있다"며 "목포에서 부산을 잇는 신해양 실크로드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

## 외유 대신 의정 활동 택한 구의원들

### 광주 북구의원 6명 연수 포기

광주시 북구의원 일부 의원들이 외유성 해외연수 대신, 의정활동을 선택했다.

30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구의회 소속 20명의 의원 중 14명이 다음달 5일부터 9일까지 두 그룹으로 나눠 각각 싱가포르와 일본을 찾는다. 싱가포르를 방문하는 의원은 10명, 일본은 4명이다. 싱가포르 1인당 예산은 218만 원, 일본은 150만 원이다. 총 소요예산은 3200만 원이다. 하지만 매년 해외를 찾는 기초의원들에 대해 포장만 연수일뿐 사실상 주민 형세로 나들이 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끊임없이 이어 북구의회 6명의 의원들이 연수를 포기했다.

선승연 의원은 "해외연수 일정 직후 제2차 정례회와 집행부 행정사무감사가 예고

돼 있다. 조선 의원인 만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고 싶다"며 불참 이유를 밝혔다. 기대서 의원도 "구민 세비를 받는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고 싶다. 행정사무감사에 대비, 열심히 공부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 해외연수를 떠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백순선 의원도 "다음달 의회 일정에 만전을 기하려 이번 일정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소재석 의원은 "구정질의,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안될 것 같아 불참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현수 의원은 "열악한 구청 재정 상황과 몇 달 거치지 않은 의정활동에 해외연수를 떠나기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며 불참 사유를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100원 택시 이어 1000원 여객선 도입되나

### 전남도, 섬 주민 교통복지 개선 위해 추진 검토

### 예산 확보 걸림돌

전남도가 '100원 택시'·'1000원 버스'에 이어 '1000원 여객선' 도입을 추진한다. 김영록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검토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섬 주민 교통복지 지원 정책의 하나로 1000원 여객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난 26일 완도 생일도 '가고 싶은 섬' 개관 행사에서 김지사가 관련 부서에서 1000원 여객선 도입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섬 주민들이 여객선을 이용할 때는 현재 2000~7000원 가량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를 1000원으로 낮춰 일괄 적용하는 방안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해상 운송에 보편적 교통복지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하고 섬 주민의 교통비 부담도 완화해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고흥군도 섬을 오가는 도선 요금을 내년 1월부터 1000원으로 단일화하기 위해 최근 도선운영위원장과 간담회를 했다. 1년을 기준으로 고흥 관내 6개 도선사에 모두 1억2000만원을 지원

하면 매월 40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고흥군은 도선사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를 마련해 우선 고흥군민을 대상으로 1000원 요금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도선요금을 1000원으로 단일화하면 섬과 육지를 더 자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고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요금 단절제를 확대하는 것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산 확보가 걸림돌이다.

지난해 섬 주민의 여객선 이용실적은 약 230만명으로 이들의 요금 지원에 쓰인 예산만 100억원에 달했다. 1000원 여객선이 도입되면 여기에 약 100억원 가량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데 전남도로서는 큰 부담이다. 지자체 재정여력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비나 시군비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이유다.

전남도 관계자는 "예산 확보 없이는 시행하기 힘든 문제지만 국비 확보 방안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생명사랑 으뜸전남
내 고향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

# “도민이 행복한 환경·산림 복지 실현”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

**에코 푸른 숲 전남 만들기**  
산림 휴양복지 기반 구축

**도민 제일주의 소통행정 및**  
민원 서비스 확대

- 전기자동차 보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기오염 배출시설 관리
- 영산강·섬진강·탐진강 수질개선, 상·하수도 보급, 지방 상수도 현대화
- 전라도 천년 가로수길, 영산강 경관 숲, 재해방지림 및 소득 숲 조성
- 산림휴양시설 통합플랫폼 구축, 숲길 정비 및 휴양·치유벨트 조성
- 동부지역 도정자문협의회 운영, 주민 맞춤형 강좌, 현장소통 간담회 추진
- 위임 민원 확대 및 민원 처리기간 단축, 현장 방문 민원 처리제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환경산림국)는 언제나 도민 곁에 있습니다.

**동부지역본부 걸어온 길**

2005.10.21. : 동부출장소 개소(1과, 3담당, 17명 / 환경 업무 일부)

2014.08.01. : 동부지역본부(환경국) 승격(3과, 11담당, 56명)

2018.08.02. : 동부지역본부 조직·기능 확대(환경산림국)

(5과, 18팀, 1사업소, 127명 / 산림업무 이관)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환경산림국)**  
순천시 백강로 38(연향동) / T. 061-286-7821~4